



이태원 책임자 윤석열, 책임 전가가 위해 야비한 수작 부리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곧 49일이 된다. 참사 당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날 때마다 아까운 158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말처럼, 이태원 참사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윤석열의 잘못된 권력 배치 우선순위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비극이었다.

왜냐하면 참사 당일 경찰력·공권력 배치의 우선순위가 정부 비판 시위 통제(공안)와 마약 단속이었기 때문이다. 대중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임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윗선의 명령권자들, 무엇보다 최고위 지시자인 윤석열의 기본 방침이었다.

마약 부검

최근 검찰이 일부 유가족에게 '마약 부검'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경찰은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에 대해 일괄 '마약 검사'를 했다고 한다.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검정의 이런 행태는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함이다.

또, 참사의 책임을 전가할 속죄양을 찾기 위한 야비한 수작이다.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에게라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이 보라, 마약 복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거다' 하고 참사의 본질을 호도하려 했을 것이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정부와 검·경의 행태에 "우리 애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정부가 참사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덮는 데만 급급했음이 또 확인됐다. 윤석열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참사", "피해자", "희생자" 용어에 이어 "압사"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가족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 정황도 폭로됐다. 유가족이 뭉쳐 저항에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유가족들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납골당에서 무작정 기다리면서 다른 유가족을 겨우 만날 수 있었다.

그래 놓고 한 언론사가 유가족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2차 가해" 운운한 것은 역겹다.

꼬리 자르기 수사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열흘이 넘었지만, 보고서 삭제 의혹이라는 지엽적 문제로 경찰관 2명만이 구속됐을 뿐이다.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는 더 줄었다.

그러니 참사에 최대 책임 있는 실권자들(대통령 윤석열,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경찰청장 윤

회근 등)에 대해서는 말해 뒀하겠는가.

이들은 적반하장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에 빗대며 파업 탄압을 진두지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시간만 벌어 주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경찰력 오용 통치가 낳은 참극이자 미래의 더 큰 비극의 예고편일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
화물연대 파업 평가, 중국 '백지 시위', 역대 국정조사의 문제점, 새로 밝혀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야비한 수작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다. 연대가 아쉬웠다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 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대부분의 언론은 파업 종료를 보도하면서 “조합원 61.8퍼센트의 찬성”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보수 언론의 경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동자들이 “백기 투항”했다고 썼다.

그러나 실제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13.67퍼센트밖에 안 됐다. 투쟁에 나섰던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적지 않은 수(37.6퍼센트)가 반대표를 찍었다.

생계비 위기 저항의 잠재력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파업에 나선 것도 심각한 생존 위기 상황 때문이었다. 하루 평균 14~16시간 장시간 운전대를 잡아도 치솟은 기름값과 부품 비용, 눈덩이처럼 커지는 은행 이자 부담 등으로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반면 윤석열은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더욱 광범한 대중의 불만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성과를 낸다면 반윤석열 운동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었다.

이번 투쟁은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싸울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광범한 지지·응원이 뜻하는 바다.

윤석열 퇴진운동은 12월 3일 촛불 집회를 화물연대 파업 지지 집회로 열었다. 정치적 운동이 처음으로 대중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적극 결합시



김미영 기자

켰다. 이것은 약소하지만 분명 전진이다.

윤석열의 범정부적 탄압 공세

윤석열은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나 발동하고, “국가적 재난,” “북핵 위협” 운운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심화하는 경제·안보 위기 등 다중 위기 상황에서 그 고통을 대중에게 떠넘기려고 필사적이다. 그래서 노동자 저항을 짓밟고 권위주의적이고 강경하게 탄압했다.

이번 투쟁은 현 정세하에서 세력 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였다. 화물연대 파업은 (그 함의상) 단지 그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불황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방어 문제에 국가 권력이 나서 통제하고, 사용

자들도 웬만해선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의 삶과 조건을 지키려면 투쟁이 보편화(확산)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결정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등 노동운동의 개혁주의 지도부들의 대응은 그럭저럭 체면치레 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연대를 조직하기는 했지만 매우 부족했다.

사실상 백기투항 강요한 민주당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12월 8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퇴하자 윤석열 정부는 그 안조차 “무효”라며 거부하겠다고 나왔다.

민주당의 후퇴는 그 정당의 진정한 성격에서 비롯한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의 지지를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다. 비

록 기업인들은 민주당을 차선책으로 여기지만 말이다.

그들은 이태원 참사 문제에서도, 긴축 예산안이나 집시법 개악 문제에서도 타협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에 기대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워야 한다. 개혁과 해방은 다른 누가 선사해 줄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당분간 윤석열은 더한층 자신감을 얻고 강경하게 나올 듯하다. 그러나 그러다가 자칫 실수하면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공격했다가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윤석열은 취임 7개월 만에 만만찮은 퇴진 운동에 직면해 있다. 비록 이번에 씩씩하게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노동자연대 TV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7강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렌안면 항쟁과 그 유산**

일시 | 12월 14일 (수) 오후 8시 | 발제 |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121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 문의: 02-2271-2395